

제 4 장

국회와 대통령

국회의 자율성 확보

박 관 용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하느냐보다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에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천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되긴 했지만 과거에는 대통령이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회직의 임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도 역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조직이나 기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허가가 난 일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조직과 기구를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국회의 전문성은 축소될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제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대통령이 당직을 버린다 해도 사실상 당과 무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직을 이탈하여 토론을 하게 되면 국회와도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소야대일 경우는 권력의 균형 때문에 당직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지만 반대로 여대야소인 경우는 오히려 당직을 이탈했을 때 정치적 쟁점에서 여야간의 극한 정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응답

■ 임성학

국정원장 임명이나 파병동의안 처리 등의 과정을 보면 대통령의 권력이 과거와 같이 무소불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국회를 통제하는 다른 기제가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현재 선거법이나 국회법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모두들 동의하고 계시지만 저는 국회의 기능을 더 확대하는 측면으로 개혁이 진행되면 오히려 국회가 비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회의 위상과 함께 정부의 균형적인 발전도 중요합니다.

■ 박관용

예전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권한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 동안의 관행들에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너무 비대해져 막강해진다는 것은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장악

허 화 평

제가 워싱턴에 5년 있는 동안 저는 미국에서 민주주의(American Democracy)라는 말 대신 법치주의(Rule of Law)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입니다. 따라서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도 역시 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은 인치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또 정당 실권자로서 막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제군주보다 선택된 지도자에 의한 자의적 권력행사가 더 악하다고 봅니다. 관료들 권력의 도구 삼아 또 당을 마치 시녀처럼 부리는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법치가 아닌 인치의 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가 약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정상적 의회정치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제왕적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 행사에서 회유(manipulation)와 위협(intimidation)의 힘은 매우 막강합니다.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위협을 하면 해당되는 사람은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제도 하에서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의 권한을 비유하자면 아테네의 참주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헌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결정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쓴 칼럼을 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개혁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검제만 봐도 국회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특검의 내용은 정치적 흥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특검제 임명에서도 인준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은 곧 의회는 그렇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헌법적 모순을 해결하고 그 다음 국회 자체의 결함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

남 재 희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삼김(三金) 시대가 종식되고 민주화로 들어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서양사람들의 말로 'interregnum' 즉, 권력의 공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병안의 소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 노태우 전(前) 대통령 시기 이전에 비해 여소야대가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과 결합하여 대통령과 국회, 청와대와 국회 간의 관계는 완전히 변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즉 거버넌스(governance)를 볼 때는 항상 원심력과 구심력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균형(balance)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현상유지의 사회가 아니라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내정당화나 상향식 공천 등을 도입할 때 균형과 안정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민주화다 자율이다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통제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에서 균형의 접점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보다는 대통령이 책임감도 더 크고 사명감도 더 큼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국회의원은 300명 가까운 다수이지만 대통령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구심력을 더 심어줘야 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의 구심력은 아직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당의 분열이라든지 일부 언론과의 전쟁은 바로 대통령이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

생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를 보면 우리와 비슷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차베스(Chavez)는 취임 이후, 이른바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책을 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써 정면돌파하려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찬반으로 갈라졌고, 대통령과 언론은 정치적인 줄다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차베스 대통령이 승리하긴 했지만, 대통령과 언론이 정치적 대립상황에 몰두해 있는 동안, 20세기 최악의 재난이 남미를 휩쓸고 국민들은 참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와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구심력이 강화되지 않은 바탕에서 원심력만 강화된다면 둘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전이나 역사성·책임감·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통령의 구심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는 대통령 선거에 돈이 거의 안 들게 되었습니다. 선거비용이 덜 들면 부패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리더십을 가지고 국회와의 관계에서는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내각제에 대한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과잉집중 문제는 내각책임제가 아닌 국회를 강화시키고 언론을 활성화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입니다. SK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국회와 대기업 관계를 봐도 국회에 과도한 힘을 실게 되는 내각책임제는 부정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역사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한다면 3년 내에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40위에서 단숨에 20위로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를 위해서 유럽과 같은 진보정당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증법적 역학관계를 통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제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진보정당의 존재는 우리 정치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민주화된 이후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적인 민주화로 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정당 역시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균형을 유지하고 조직을 존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응답

• 김병국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핵심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은 4차원으로 나누어보면 첫째, 대표성, 둘째, 책임성, 셋째는, 통합 그리고 네 번째가 경쟁성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성을 강조하게 되면 통합이 어렵고 어느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서로가 상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에서 이 딜레마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균형에 이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남재희

문제는 리더십입니다. 국회는 의장의 역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상임위원회는 합의를 하는 것이지 특별한 안건 이외에 큰 갈등을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의장보다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장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NGO(비정부기구)와 언론의 역할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함께 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는 구심

력이 좀더 강할 수 있고 원심력이 좀더 강할 수 있습니다.

▪ 김용호

김대중 정부까지는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의 대통령은 구심력이 없고 원심력에 이끌려 제대로 국정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가 균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지금의 한국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가 아닌 지원하는 역할만 하고 있으니까요.

▪ 남재희

국회는 대통령의 감시와 견제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이 기능들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강화하여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감시기능에 점차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청와대

이강래

저는 평소에 국회 일을 하면서 ‘우리 국회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국회 운영과정의 핵심이 정쟁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마치고 처음 고향에 내려와 무소속으로 출마를 결심했을 때의 일입니다. 지역구에서 만나뵙는 분들마다 “정치인들 싸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확인하고는 적잖게 실망을 했습니다. 정쟁의 발단이 대부분의 경우 건설적이거나 생산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당리당략이나 사소한 감정싸움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도 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약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쟁의 본질과 그 원인은 결국은 대통령 선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당총재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입장에서 국회는 단순히 행정부가 결정해야 할 법안을 관철시키는 장(場)이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당의 입장에서 국회라는 곳은 자신의 권력을 확대·유지·재생산하는 곳이며 야당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와 여당을 제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국회에서는 여야 격돌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할수록 이러한 대립은 더욱 극심해집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담당할 당시 국회는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모두 포함해도 130석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어도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과제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을 저희 당에서 배출하는 것과 총리인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설득을 위해 정말 많은 야당의원들을 만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탁도 하고 설득도 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야당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야당은 정부의 안전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목적이니 야당과 정부와의 관계라는 것이 타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야간의 정쟁이 더 격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정쟁정치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권과 대권의 분리

하나는 대통령의 당정분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민경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더 이상 당직을 가지진 않습니다. 사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총재직을 사퇴했을 때에도 당에서 여전히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김 전(前) 대통령의 당에 대한 권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당적이탈이 당운영에 그다지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경우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당에 대한 권한이 막강한 것도 아니었고 지지기반도 당보다는 일반 국민들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경선제와 당정분리를 통해 청와대의 국회지배는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만일 청와대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국회나 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검찰을 통해 즉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당구조가 미국과 같은 형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미국과 같은 정당구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되는 점은 전체적인 국가의 통제력이 급격히 지나치게 약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가 규율(*discipline*)의 중심을 잃게 되면 안정

적으로 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 말부터 저와 뜻을 같이하는 몇몇 의원들은 당혁신운동을 전개했고 그 주요 내용은 당정분리와 총재직 철폐 및 집단지도체제, 국민경선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경선은 그 자체로서 국회의원들에게 자유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차기 후보가 누가 선택될지 경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측불가능한 경쟁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사전에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가능성을 가지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은 민주화와 자유화와 직결됩니다. 이제는 당정분리와 국민경선을 통해 국회가 단순한 대권에 대한 정쟁의 장이 아닌 자유화와 민주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당에서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국정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결과를 발표할 때는 국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당총재들간의 경쟁이 곧 대권의 경쟁과 연결되고 또한 제왕적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이런 비자율적 구조 안에서 거의 30년 이상 활동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이런 권위주의적, 비효율적 정당운영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김(三金)과 같이 강력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모든 제도가 자율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도 곧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의응답

▪ 이내영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항상 신당이 창당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이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내 세력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강래

솔직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선진국은 정치의 목적이 정권획득과 정책결정에서의 영향력 확보라면 우리나라 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권력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은 권력이 아닌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과정 어디에서도 정책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에 관련된 발언을 해도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정책활동에 있어 동기부여를 받지 못합니다. 국민의 관심을 먹고사는 의원들로서는 국민들에게 시선을 끌 수 없으면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신당창당과 관련한 문제는 작년 대선 이후 당개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지구당위원장 폐지문제였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해결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복수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개혁안의 골자는 현재의 대세는 후보자 공천이 상향식 공천제로 갈 수밖에 없지만, 이 상향식 공천제의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구당위원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평시에는 관리위원장제를 시행하고 선거기간 동안만 후보자가 위원장이 되는 선거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지구당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이 개혁안을 실행에 옮길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개혁안을 실행할 운영위원회는 당의 지위보다는 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될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력다툼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일부분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호남출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삼김(三金) 이후의 정치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특정지역 기반에 편중된 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은 이제 그 기득권 다 포기하고 당을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항상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정치구조가 개편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어느 당이든 지역에만 기반하지 않고 정책이슈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김(三金) 이후 지금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장 훈

지금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당정분리와 대선후보의 경선을 통해 청와대·대통령과 여당,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가 상당히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변화될 것이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대통령과 정당의 관계변화에 있어 당정분리와 경선이 핵심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변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회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사람, 예를 들면 말씀하신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떤 방법으로 야당위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즉, 청와대와 국회의 관계가 지금과는 달랐던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주로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관계가 변한 만큼 그 설득방식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도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권력 하에서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물론 야당보다는 적응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겠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와대는 어떻게 의원들을 대

통령의 정책방향에 적합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임성학

같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국정원 인사문제에서 바로 이러한 한계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와 같이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조정기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강래

그것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에 청와대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운영시스템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의 여당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원내총무의 입장과 청와대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 있어 핵심은 기관과 기관, 그룹과 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편하게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 기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간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견조정 과정에서 평소 대화와 설득을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될 때 국회의 위상도 확립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청와대의 심부름이나 하는 역할이 아닌 삼권분립체제 하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위치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5 장

국회와 정당

정당에 대한 국회의 자율성 확보

박 관 용

중앙당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에 대해 당 간부 회의에서 제한을 하면 그 안은 통과될 수 없고, 반대로 추진하면 그 안에 대해 제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당이 공천권뿐 아니라 정책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중진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을 장악하고 모든 권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원내로 옮기고 원내당원들로 하여금 중앙당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상한 현상은 정당출입기지는 있는데 국회출입기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 대변인들이 국가가 아닌 소속정당의 대변인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 대변인들은 당연히 소속정당의 의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당 출입기자들의 경우는 소속정당 대변인이 말하는 내용 외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여야 출입기자들간의 의견충돌로 서로 다툼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기자